

“돼지고기 수입조치 즉각 철회하라”

—본회 전국임원·지부장 정부에 강력 촉구

〈취재 : 김 동 성〉

본회는 정부의 5·28 돼지고기 수입허용조치에 대해 이를 강력 비난하고, 수입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본회 전동용 회장은 「이번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조치는 양돈농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강력 비난하고, 「지난 1년간 양돈산업 종사자의 1/3에 해당하는 8만 농가가 도산하는 세계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격이 일시 상승했다고 정부가 돼지고기를 수입한 것은 양돈산업 말살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이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또한 본회는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허용조치가 발표되자 즉각 농림수산부에 이의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전국임원·지부장연석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잇달아 열고, 수입조치

에 강력대응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4일 긴급소집된 전국임원·지부장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돼지고기 수입허용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하고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전국임원·지부장들은 「현재 양돈농가들은 쇠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통조림, 소시지 등의 수입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데, 농림수산부가 수출업자들에게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생업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최근의 돼지고기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나, 이는 전체양돈농가의

1/3에 해당하는 8만농가의 도산위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작년에 돼지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8만농가가 도산하도록 수수방관만 하다가 가격이 일시 올랐다고 즉각 수입을 허용한 조치는 독점식육가공자본(재벌기업)만 위하고, 양돈농가의 생업을 포기케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는 「정부는 그동안 육가공 원료육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본회가 수십차례 건의한 관세의 환급이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도축세 감면, 금융지원 등에 대해선 어느것 하나 들어주지 않다가, 수출을 위해 수입을 하겠다는 것은 통증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처방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비판하고, 「돼지고기 수입허용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관세·부가세·도축세 감면과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이어 임원·지부장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복)는 6월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를 방문,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조치와 축산물가격정책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작년에 돼지값 하락시엔 양돈농가들에게 전혀 대책을 세워주지 않다가 일시적 돈가상승에 신속하게 육가공 3개사에 대책을 세워준 이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국내 양돈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 돈육 수출 손익분기 점은 양돈생산비 이하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돼지고기를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 지, 돼지고기 수입으로 오제스키병의 국내감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입돼지고기의 시중유통 방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이들은 축협중앙회를 방문, 축협이 돼지고기 수입 반대입장을 밝히고 수입추진을 하는 것은 이용배반적인 것 같은데, 수입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시행할 것인지, 업체별 수입추천량은 얼마나 되는지, 가공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의 수입허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를 물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밖에도 본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돼지고기 수입업체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작년도의 돈가폭락으로 아직도 양돈농민들이 부채를 못갚고 있는 실정들을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알리기로 했다.

본회는 이밖에도 돼지고기 수입업체에 공문을 보내, 양돈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돼지고기 수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돼지고기 수입을 결정한 요인인 돼지값의 일시적 폭등은 정부의 정책부재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의 돼지값 상승은 작년의 흑심했던 돼지값 폭락으로 1년세에 7만6천명의 양돈농가가 양돈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작년도에 양돈생산비는 10만6천원이었는데 비해 돼지가격은 작년 10월에 8만8천원, 11월 7만9천원, 12월 8만2천원으로 생산비를 크게 밀돌았다. 이같이 돼지값 폭락이 지속되는데도 정부에서는 별다른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지 못해 많은 양돈농가들이 도산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작년 3월 24만1천호였던 양돈농가가 장기간의 돼지값 폭락으로 금년 3월엔 16만5천호로 급감한 정부통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하겠다.

또 우리나라의 금년 양돈생산비는 11만원으로 영국의 8만원, 덴마크의 8만3천원, 대만의 8만2천원선

보다 훨씬 높는데, 그 원인도 알고 보면 정부의 정책부재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고, 고가의 국산옥수수과 대두박의 사료원료 강제 사용으로 양축농가가 연 792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시적 돈가상승을 이유로 수입을 허용한 조치는 온당치 못하다. 정부는 수입허용조치 이전에 먼저 이들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해 줘야 한다. 정부가 관세·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자가배합사료공장 허가, 사료원료 수입 자유화, 분뇨처리 자금 등 제도만 개선해 주면 생산비를 30% 이상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돼지가격도 안정돼 정부가 목표표 하는 돈가하락과 물가안정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양돈농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돼지고기 수입허용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에 비해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 전국임원·지부장 회의에서 채택한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한 우리의 주장”에 대한 성명서 전문은 43쪽 내용과 같다. **■**